

### 3>> LINC+ 사업 점검



### 5>> 교수업적평가, 어떻게 변했나?



### 8>> 서울시장 후보들 인터뷰



## 구성원 의견 반영·‘차기’는 새 제도로

〈총장선출제 관련 두개의 원칙〉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지난 3월 30일 총장선출제 개정과 관련해 학교법인 경희학원(법인)과 대학평의원회대표단(대표단)이 가진 면담자리에서 법인이 제시했던 ‘이사회 산하 상설기구’가 베일을 벗었다.

법인은 제4차 대학평의원회에서 법인 공영일 이사장을 포함한 5명으로 ‘총장선임법인소위원회(소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다. 법인은 이사회 산하에 총장선출제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총장선출제 검토와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위원회는 공 이사장, 박찬범 이사, 장현수 이사, 윤석인 개방이사, 유명철 이사로 구성됐다. 소위원회는 법인 이사회로부터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의결기능과 권한을 위임

받았다. 지난 3월 면담에서 법인이 “상설기구 논의를 통해 8월 이사회에 맞춰 총장선출제 개정의 가닥을 잡으면 시간은 충분하다”고 공언했고, 이번에 소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미뤄보아 법인 역시 총장선출제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만 소위원회의 정식명칭에 ‘총장선임’이 명시돼 있어 총장선출제 개선을 바라보는 대표단과 법인의 시각차가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5월 15일 열린 제4차 대학평의원회에서 직원노조 김중현 위원장은 “소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현 총장 임기 내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 빠른 만남을 제안했다. 이에 법인 서규훈 사무처장은 “이사회 또한 타 대학 제도를 참고하여 각각의 장단

점과 모델에 대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 25일에는 대표단과 소위원회가 첫 만남을 가졌다. 대표단은 만남에서 “총장선출제도의 변화를 주장한 것은 구성원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구성원의 진전된 정치의식으로 총장선출제도가 바뀌려고 하는 것이니, 구성원의 생각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원의 뜻과 동떨어져 단순히 ‘제도’만을 변경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표단은 “차기 총장은 이번에 바뀌는 총장선출제에 의해서만 임명하자”고 제안했다. 소위원회는 대표단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원회와 대표단 각각 실무 수준 ‘소통위원회’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꾸준히 만날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은 “적어도 6월 중순까지는 첫 소통위원회를 가지자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소위원회는 이번 만남에서 “8월까지는 반드시 제도를 만들겠다”며 “구성원 뜻 또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법원에서 소위원회를 만든 것 자체가 제도 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성원 또한 신뢰를 가지고 법인을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4월 26일 열린 제2차 이사회의에서 타 대학 총장선출제가 보고·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하버드대학교 펜실베이니아 대학 등 해외 대학과 포항공과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 국내 대학의 선출제도를 각각 검토했다.

## 우리학교 비정규직 채용 방침, 인권위 “조사 중”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우리학교 비정규직 채용방침을 두고 인권침해 여부 판별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조사에 나섰다.

문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방침이 명시된 우리학교 공문 두 건에서 발생했다.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양식 및 관련절차 변경>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변경양식 및 유의사항 공지>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본교 기간제근로자는 2년까지만 채용이 가능하며, 2년 경과시에는 근무경력 단절 여부와 무관하게 재채용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해당 공문은 인사처가 지난 1월 4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학교 각 행정부서로 발송했다.

인권위는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불가방침에 대해 차별문제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인권위는 관련 공문을 우리학교에 전달하고, 해당 방침이 나오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인권위 차별조사과 조은영 담당 조사관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지만 학교 측 답변을 23일까지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 차별 조사과로 입건돼 사실경위 제출 요구

우리학교 인사처는 지난 23일 답변기한을 1주일 가량 연기했다. 인사처는 24일 “현재 답변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두고 인권위는 인권침해 요소만을 조사하는 것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인권위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권위의 조사와는 별개로 재채용 불가방침을 두고 학내 구성원의 비판도 모이고 있다. 경희학원노조는 “대학의 방침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

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경희학원노조 측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학은 수많은 비정규직들의 권리를 빼앗고 있다”며 “이미 채용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우리학교에서 근무했던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으로 다시 채용하라는 것은 채용비리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직원 사이에서도 이번 방침은 논란이다. 갑작스러운 인사처 방침에 우리학교 행정부서 상당수가 당혹감을 표하는 한편, 불만까지 표하고 있다. 일부 직원은 비정규직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처사라고 혹평했다.

### 직원들 “재채용 불가방침 법적근거 없다” 반발

한 단과대학 행정실 A 계장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근무단절을 둔 뒤 다시 비정규직으로 계약하는 일이 우리학교에서 다년간 성행해왔다”면서 “우리 행정실 직원 채용과정에서도 재채용 불가방침으로 인해 떨어진 분이 있어, 갑자기 해당 방침을 내세운 의도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문제인식 자체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단과대학 행정실 B 실장은 “2년 계약 만료 후 근무단절을 통해 다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따져보면 재채용 불가방침은 문제소지가 있다”며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는 생각 없이 해당방침이 명시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인사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라는 입장이다. 인사처 박진호 과장은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일정부분 행정부서에서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캠퍼스 제50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커넥트(KHU:NNECT) 선본이 미술대학 504호에서 정책 PT를 하고 있다. 커넥트 선본 정후보는 송태현(경영학 2014), 부후보는 황규리(자율전공학 2016)이다. 송 정후보는 “무엇이든지 연결할 수 있는 총학이 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지연 기자)

## 학교까지 뺀 ‘몰카’ ... 총학 “사전 예방하겠다”

〈국제캠〉

박소영 기자 notold@khu.ac.kr

【국제】인터넷 커뮤니티 ‘위마드’에 올라온 우리학교 남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사진이 우리학교에서 촬영된 것이 아닌 것으로 학교 측은 결론 내렸다.

지난 14일 홍익대 누드크로키 사건으로 화제가 되었던 커뮤니티 ‘위마드’에 우리학교를 비롯하여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남자 화장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영상들이 게재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화장실

이용 못하겠다”는 등 불안감을 토로했다.

논란이 터진 다음날인 15일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는 “제보 직후 교내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사실 관계 확인을 하고 있다”며 “몰래카메라 촬영 및 음란물 유포는 성별 및 장소를 불문하고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하며 피의자가 내부 구성원으로 밝혀질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총학생회는 다음날 국제캠 부총장, 미래혁신원단장과 함께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미래혁신원,

성폭력대책위원회, 관리팀 등 학내 부서가 협력해 자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위마드의 게시물은 우리학교에서 촬영된 게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미래혁신원 미래혁신단 학생지원센터 박현기 계장은 “학교 자체조사 결과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화장실 몰래카메라 사진은 우리학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교내 양변기 모양과 사진 속 양변기 모양이 일치하지 않으며, 해당 사진과 동일한 배경 및 구조의 화장실은 캠퍼스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일단락 된 이후 총학생회는 6월 4일~5일 양일간 총학생회, 학생지원센터 및 관리팀, 용인동부경찰서가 협력하여 전체 화장실 및 샤워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탐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총학생회는 “단순 탐지가 아닌 몰래카메라 설치 의심되는 화장실 구멍 또한 점검하여 개·보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총장실, 미래혁신원과 논의 결과 자체적으로 상시 점검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를 구입하여 차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Facebook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에브리타임 : 대학주보 게시판

스포츠 선부 릴레이 인터뷰는 지면 사정상 온라인에 게재됩니다.

### 전문가 칼럼

몰래카메라 촬영행위 근절돼야 정완(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7면

